

# 「6.13지방선거」 관련 사회복지 정책의제 제안서

공동주최	<b>‘복지도시대전만들기 공동행동’</b> (대전사회복지협의회, 대전사회복지사협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YMCA)
참여단체	대전사회복지관협회, 대전아동복지협회, 대전어린이집연합회, 대전장애인복지시설협회, 대전재가노인복지협회, 대전푸드마켓연합회, 대전사회복지시설협회, 대전지역자활센터연합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대전시협의회, 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 대전협회, 대전공동생활가정,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대전노인복지협회, 한국노인종합사회복지관협회 대전지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대전지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대전시협의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대전충청지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대전시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대전시협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대전지회, 대전장애인주간보호시설연합회, 대전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전공동생활가정, 대전단기거주시설협회(무순/총24개 직능단체)

# C.O.N.T.E.T

## I. 「복지도시대전만들기 공동행동」

사회복지 6대 우선정책의제	1
----------------	---

## II. 「복지도시대전만들기 공동행동」

사회복지 관련(직능)분야 정책제안서	26
1. ‘대전광역시시니어클럽협회’ 정책제안	29
2. ‘대전광역시정신재활시설협회’ 정책제안서	31
3.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대전지회’ 정책제안서	36
4.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대전시협의회’ 정책제안서	36
5. ‘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대전시지회’ 정책제안서	36
6. ‘대전광역시재가노인복지협회’ 정책제안서	42
7. ‘대전광역시교육복지사협회’ 정책제안서	44
8. ‘대전광역시지역자활센터협회’ 정책제안서	45
9.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대전노인복지협회’ 정책제안서	46
10. ‘대전광역시아동복지협회’ 정책제안서	48
11.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정책제안서	50
12. ‘대전광역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정책제안서	52
13. ‘대전광역시공동생활가정’ 정책제안서	57
14.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제안서	58
15.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정책제안서	59
16.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정책제안서	62





2018. 6.13지방선거  
「복지도시대전만들기공동행동」

‘사회복지 6대  
우선정책의제’



## ‘사회복지 6대 우선정책의제’

우선순위	우선정책의제	세부설명
1	대전시민복지기준선 재정립 및 이행체계 수립	1P
2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3P
3	사회복지직능단체 기능정상화	8P
4	사회복지전달체계 민관협력 강화	14P
5	대전사회복지인권지원센터 설립	16P
6	재가노인생활안심센터 설립	22P

### ○ 우선정책의제 선정

대전의 민간사회복지 관련(직능)단체 28개 기관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 정책의제 공모를 통해 제안된 총 16개 직능단체의 39개 정책 中 대전민간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우선적 정책의제를 심의하여 선발하였음.



## 대전시민복지기준선 재정립 및 이행체계 수립

### 현황 및 필요성

- 대전시민복지기준선은 대전 시민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평균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용·주거·돌봄·건강·교육 등에 사회복지기준선을 마련을 목표로 하였음.
- '15. 1.~ '16. 2월까지 학술연구 용역으로 대전시민 누구에게나 적정수준의 복지와 삶의 질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과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각 영역별 복지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된 대전시민복지기준선이 마련되어 있으나 그 실행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시민복지기준선을 이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조차 의심 할 만큼 제대로 관리 이행되고 있지 않음.
- 현재 마련된 대전시민복지기준선은 대전시의 선언적 행정에 불과한 상황이므로 기 마련된 시민복지기준선을 전면 재검토하여 대전시민의 복지와 삶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이행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복지기준선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단계과정으로 이행 점검체계를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대전시민복지기준선을 재정립함에 있어 복지정책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현 정권의 정책기조와 국정과제를 최대한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제안내용

- 대전시민의 복지수준에 맞추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복지기준선 마련
- 대전시민복지기준선 재정립 및 이행을 위한 점검체계를 수립하여 타당한 복지기준선에 따른 서비스체계 구축과 서비스지원을 위한 로드맵 마련
- 대전시민복지의 복지욕구를 매년 실시하여 대전시민 맞춤형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복지 수요와 삶의 질을 담아 낼 수 있는 복지기준선 개선방안 마련

## 정책수행과제

- 복지기준선 수립 및 이행의 근거가 될 조례 제정
  - 조례를 기반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기준선 수립
- 대전시민복지기준선 재정립 및 이행점검체계 구축
  - 다양한 계층(공무원, 사회복지종사자, 대전시민, 전문가 등)의 참여 보장
- 대전시민의 복지욕구 조사 실시를 통한 복지기준선 개선방안 모색
- 대전시민복지 최저선 및 적정선 제시 및 연차별 계획 수립
  - 시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기준선 제시
  - 시민복지 최저선을 이행하기 위한 연차별 계획 수립

### 현황 및 필요성

- 정부 및 지방정부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서비스 확대를 지속적으로 이루고 있으나,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직접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에게는 과중한 업무에 비해 낮은 처우로 일관하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과 개선은 외면하고 있음.
- 대전광역시 2013년에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수수준으로의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조치는 전무한 상태임.
- 더구나 사회복지 시설유형 또는 재원 구조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수준으로의 임금격차 현상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하여금 심한 괴리감과 서비스전달에서의 의욕상실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 심지어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급여총액 대비 50%대의 수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인 열악한 복지시설과 최소한의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복지시설이 있는 상황으로 해당시설에서의 근속년수가 지속될수록 현격한 임금격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 「2017년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과 같이 지급,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구축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체계’ 적용으로 ‘표준화된 단일임금체계’를 구축하여 사회복지분야 간 보수수준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반드시 이를 적용해야 함.



## 제안내용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3조 ②항(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및 제10조(처우개선) 1항(사회복지사 등은 보수 및 지위 등에 있어 사회복지 분야 및 유형 등에 관계없이 동등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으로의 처우개선 및 표준화된 단일임금체계를 도입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수준으로의 처우가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임.
- 2018년 추경예산 및 2019년 본예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여 사회복지사라는 이유로 자기희생을 수용당하는 부당하고 열악한 시설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할 것임.
-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수준으로의 향상을 위한 선제적 지원으로 추가수당신설 등을 신설하여 지급함으로써 임금격차의 해소를 위한 노력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중 보조금 지급 수준이 낮아 수당 자체를 편성하지 못하거나 낮게 책정하여 지급하는 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청소년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자활지원센터, 성폭력피해지원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피해지원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등)을 중심으로 별도의 예산 지원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수당체계 일원화가 필요함.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으로의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조치로 위에 해당하는 처우가 낮은 시설을 대상으로 임금격차 해소와 보수수준의 향상을 위해 종사자 수당(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등)을 추가 신설하여 지원함으로써 최소한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보완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 소규모인 사회복지시설의 경우(특히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지원시 종사자의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명확히 구분하여 분리 지급되어야 함. 사회복지시설의 급여수준이 열악하게 책정되는 원인은 인건비 개선 명목으로 지급된 보조금이다 하더라도 예산의 분리 교부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업비 및 관리운영비를 우선 책정하여 편성하고 남은 예산으로 이후 인건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인건비 개선의 효과는 없는 실정이므로 반드시 종사자의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분리하여 교부해야 함.
- 현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가 매3년 주기로 제2차 조사까

지 시행되었음. 향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단일임금체계 구축을 위해서 제3차 실태조사는 2019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조사된 실태를 기반으로 처우개선 및 이에 따른 지원계획수립과 실제적 예산반영 계획수립을 2020년에 이루고, 수립된 지원계획이 2021년에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정책수행과제

- 표준화된 단일임금체계 도입
- 2018년 추경예산에 추가수당신설 적용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 예산 반영
  - 사업대상 : 종사자 수 2,648명
- 사회복지시설 중 국비지원시설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보완적 대책 마련
  - 명절휴가비 및 가족수당 등 미지급 시설종사자에 대한 수당 지원
  - 사업대상 : 종사자 수 605명
- 보조금 교부 시 운영비와 인건비 분리 지급
- 실효성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원계획수립을 위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 조기 시행

□ 참고자료>

## 2018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계획

①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 : 단일임금체계 추진 및 공무원 95%수준 처우개선

② 서울시의 근로여건 지원(※ 2017년 적용기준)

- 장기근속 유급휴가 : 10년 미만 5일, 10년 이상 10일
- 대체인력 지원사업 : 425백만원(장기근속휴가 및 출산·육아 등의 결원 발생시)
- 종사자 단체연수비 : 300백만원(700명/하위직급 실무직원 우선 선발지원)
- 맞춤형 복지포인트 : 2,171백만원(10호봉 미만 150포인트, 10호봉 이상 200포인트)

③ 서울시의 단일임금 체계 : 공무원 직급과 비교표(\*이용생활시설 전직급 완료)

공무원 비교직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비교직급 설정 기준	
	직급	이용시설	생활시설	종사자 규모	경력
5급	1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이상
				10인 미만	25년 이상
6급	2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미만
		부장	사무국장	-	15년~25년
7급	3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미만	15년 미만
		부장	사무국장	-	13년 이상
		과장	과장	-	13년 미만
8급	4급	대리	선임생활지도원	-	-
9급	5급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생활지도원	-	-
9급(96%)	6급	간호조무사, 조리사 안전관리인, 사무원 운전기사	관리인	-	-
9급(93%)	7급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기능직	-	-

④ 서울시의 수당지급 기준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기말수당	-	-	-	-	2018년기본급화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기타 20 둘째 60/셋째 100	2018년 둘째 40천원 추가지원
연장근로 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 금×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일반직:월15시간 2교대근무자 월40시간 예산 범위 내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2회(설,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	매월	100	
관리자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	매월	200	

## **5** **서울시의 사회복지 종사자 봉급표(2018년)**

(단위 : 원)

직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	-	2,737,000	2,314,000	2,036,000	1,926,000	1,916,000	1,906,000
2	-	2,796,000	2,366,000	2,079,000	1,949,000	1,928,000	1,918,000
3	-	2,858,000	2,430,000	2,142,000	1,956,000	1,939,000	1,930,000
4	-	2,919,000	2,490,000	2,187,000	1,968,000	1,956,000	1,942,000
5	-	2,973,000	2,548,000	2,247,000	2,006,000	1,968,000	1,954,000
6	-	3,118,000	2,679,000	2,380,000	2,139,000	2,091,000	1,975,000
7	-	3,198,000	2,762,000	2,465,000	2,216,000	2,170,000	2,041,000
8	-	3,286,000	2,847,000	2,534,000	2,284,000	2,248,000	2,115,000
9	-	3,364,000	2,933,000	2,618,000	2,366,000	2,332,000	2,191,000
10	-	3,457,000	3,018,000	2,690,000	2,434,000	2,400,000	2,281,000
11	-	3,541,000	3,100,000	2,783,000	2,524,000	2,482,000	2,351,000
12	-	3,596,000	3,146,000	2,818,000	2,563,000	2,529,000	2,401,000
13	-	3,641,000	3,190,000	2,872,000	2,613,000	2,575,000	2,440,000
14	-	3,695,000	3,246,000	2,916,000	2,654,000	2,619,000	2,494,000
15	-	3,744,000	3,292,000	2,963,000	2,700,000	2,668,000	2,537,000
16	4,138,000	3,793,000	3,337,000	3,009,000	2,749,000	2,715,000	2,587,000
17	4,184,000	3,839,000	3,388,000	3,055,000	2,792,000	2,755,000	2,635,000
18	4,230,000	3,894,000	3,435,000	3,102,000	2,835,000	2,801,000	2,685,000
19	4,287,000	3,939,000	3,490,000	3,153,000	2,885,000	2,850,000	2,732,000
20	4,334,000	3,992,000	3,533,000	3,199,000	2,931,000	2,899,000	2,777,000
21	4,387,000	4,037,000	3,585,000	3,248,000	2,978,000	2,947,000	2,828,000
22	4,441,000	4,091,000	3,637,000	3,298,000	3,028,000	2,995,000	2,879,000
23	4,499,000	4,141,000	3,689,000	3,344,000	3,074,000	3,042,000	2,928,000
24	4,546,000	4,196,000	3,738,000	3,394,000	3,124,000	3,092,000	2,983,000
25	4,601,000	4,253,000	3,793,000	3,434,000	3,167,000	3,137,000	3,029,000
26	4,654,000	4,306,000	3,845,000	3,489,000	3,215,000	3,188,000	3,084,000
27	4,711,000	4,360,000	3,896,000	3,539,000	3,264,000	3,238,000	3,135,000
28	4,766,000	4,414,000	3,952,000	3,598,000	3,329,000	3,288,000	3,187,000
29	4,823,000	4,468,000	4,000,000	3,649,000	3,379,000	3,340,000	3,238,000
30	4,873,000	4,521,000	4,054,000	3,703,000	3,427,000	3,389,000	3,288,000
31	4,873,000	4,574,000	4,106,000	3,757,000	3,482,000	3,440,000	3,339,000

※ 2018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기본급(※2017년까지 있던 기말수당(200%)을 모두 기본급화)

※ 직급별 해당 직위 1급 : 관장 / 2급 : 관장,부장,사무국장 / 3급 : 관장,부장,사무국장,과장 / 4급 : 대리/ 5급 : 사회복지사,간호사,물리치료사,영양사 / 6급 : 간호조무사, 조리사,사무원,운전기사 / 7급 : 생활보조원,취사원,관리인,환경미화원

### 사업의 필요성

#### 1. [현재의 상황]

대전의 700여 민간사회복지 유형 및 분야별 기관·시설·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 직능단체(이하 직능단체)’는 현재 열악한 상황에서도 민간복지 발전을 위한 첨병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나, 2011년 대전복지재단 설립 및 2018년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등 급변하는 복지생태계의 변화 속에서 본래의 설립취지를 충족하는 순기능이 아닌 자립과 생존의 위협에 시달리며 정체성과 고유목적사업 마저 흔들리는 등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

#### 2. [민간사회복지 직능단체 위기]

대전의 복지생태계는 대전복지재단(이후 재단) 전·후로 나뉘진다는 말이 있을 만큼, 2011년 11월 출범한 이후 대전시로부터 지원받은 연간 60여 억원의 막대한 복지예산으로 사회복지 사업의 전 영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민간사회복지 직능단체들의 고유목적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직능단체의 기능의 축소 및 기능비정상화 등 위기를 초래함과 더불어 심각한 대전시민의 복지혈세 낭비라는 우려가 있음.

또한, 독립적인 사업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각 직능별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고자 민간사회복지 현장에서 꾸준히 요구해왔던 ‘사회복지종합센터’가 무산되면서, 현재 14개 사회복지 직능단체들이 재단이 임대 관리하는 대림빌딩에 전전세 형태로 입주한 상황은 마치 민간직능단체가 재단에 종속된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직능단체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그 정체성을 모호하게 함

#### 3. [직능단체 기능정상화를 위한 로드맵 필요]

따라서, 지금이라도 ‘민간사회복지 직능단체’의 자생과 독자적 사업영역 구축을 통한 ‘기능정상화’를 위한 혁신적인 ‘대전광역시 민선7기’의 맞춤형 정책과 로드맵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통해 재단과 사회서비스진흥원을 중심으로 한 관주도형 복지가 아닌 민-관 상생과 소통의 복지허브 구축을 통한 민간사회복지 현장의 자생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가 | 직능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고유사업영역 확보

○ [현재 상황] 2011년 11월 대전복지재단이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이 대전의 20여 사회복지 직능단체의 역할 및 고유사업과 중복으로 인해 민간복지현장의 생태계가 무너지는 상황임

1) 현재 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대표사업 대부분이 기존 민간직능단체의 ‘정관’ 상 목적사업과 같은 사업이며, 이는 지난 2011년 대전복지재단 출범에 따라 진행된 총 4회(공청회 2회, 포럼 1회, 토론회 1회 / 아래표 참조)의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기존 민간사회복지 직능단체와의 사업 중복에 대한 지적과 우려’에 대해 재단이 ‘재단 정관 제4조12호(기존 민간기관·단체가 시행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를 제시하며, 민간직능단체의 고유영역 사업에 침해하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됨

□ 표\_1. 대전복지재단 설립 관련 공청회 등 추진과정

구분	일시	사업명	주최	세부논의내용				
1	2010. 12.16	제1차 공청회	대전광역시	1. 민간단체와의 기능 및 업무 중복 우려 ➡ 업무와 기능의 중복을 배제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 모색 필요 2. 복지시설과의 발전적 관계 형성 필요 ➡ 재단 업무가 기존 복지시설의 역량 강화 지원에 초점				
2	2011. 02.23	제2차 공청회	대전시의회	1. 민간단체와의 협의 및 의사소통 필요 2. 민·관 협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운영 ➡ 기존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기획·조정 역할이 필요 3. 정책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 ➡ 직접적인 복지사업은 기존 복지시스템을 활용하고 복지재단은 정책개발에 주력				
3	2011. 04.29	복지재단 설립관련 포럼	대전협의회	주제발표 1. 류진석 교수(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가. 재단과 민간기관과의 업무 중복성 문제 해결 필요 나. 역할중복영역(교육훈련, 자원 네트워크, 조사연구, 정책 건의 등)에 대한 구분 필요 2. 초의수(신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가. 협의회의와의 중복사업 지양 및 공동추진 필요 나. 민간복지 자원 배분				
			토론	3. 윤종준(대전시 복지정책과장) - 민간 사회복지업무 중복수행 및 간섭 배제, 역량 극대화의 조정자 및 보조자 역할 수행 예정				
4	2012. 11.01	재단출범 1주년 기념식 및 토론회	대전 복지재단	· 주제발표 : 류진석 교수(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가. 복지재단의 향후과제의 재설정 필요 <table><tr><td>복지재단</td><td>1) 복지행정의 전문화 및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는 복지서비스 개발 필요 2) 대전형 복지 모델의 정립 필요</td></tr><tr><td>민간조직</td><td>1) 사회복지 직접서비스 제공 2) 민간 사회복지 분야에 독자적 전문영역 존중 및 민간복지역량 제고 노력 필요</td></tr></table> 나. 복지재단과 민간조직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관계 강화 필요 ➡ 민간 복지 역량 극대화를 위한 자원·협력사업 추진 필요	복지재단	1) 복지행정의 전문화 및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는 복지서비스 개발 필요 2) 대전형 복지 모델의 정립 필요	민간조직	1) 사회복지 직접서비스 제공 2) 민간 사회복지 분야에 독자적 전문영역 존중 및 민간복지역량 제고 노력 필요
복지재단	1) 복지행정의 전문화 및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는 복지서비스 개발 필요 2) 대전형 복지 모델의 정립 필요							
민간조직	1) 사회복지 직접서비스 제공 2) 민간 사회복지 분야에 독자적 전문영역 존중 및 민간복지역량 제고 노력 필요							

□ 표\_2. 직능단체와 재단의 정관 목적사업 중 공통사업 비교표

사업내용	민간 사회복지직능단체 정관 中		대전복지재단 정관 中	비고
사회복지정책 조사·연구·개발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대전지회(제4조2호) 대전지역자활센터협회(제4조3호) 대전사회복지행정연구회(제4조4호) 대전사회복지관협회(제4조1항2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제4조6호) 대전사회복지사협회(제4조1호6호)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제4조4호) 대전지역자활센터협회(제4조1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대전지회(제4조1항1호) 대전사회복지협의회(제4조1호)	=	대전복지재단 (제4조2호, 제4조5호)	대전복지재단 (제4조12호(기 존 민간기관·단 체가 시행하는 사업과 중복되 지 않도록 한 다)) 위반
종사자 교육 및 훈련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제4조1항,8호)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대전지회(제4조3호) 한국장애인적업재활시설 대전시협회(제4조5호) 대전지역자활센터협회(제4조2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대전지회(제4조1항2호)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제4조4호) 대전사회복지관협회(제4조1항5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제4조3호) 대전사회복지사협회(제4조1호3호) 대전사회복지협의회(제4조6호,7호)	=	대전복지재단 (제4조4호)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컨설팅 등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제4조6호)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대전지회(제4조5호) 한국장애인적업재활시설 대전시협회(제4조3호) 한국장애인적업재활시설 대전시협회(제4조7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대전지회(제4조1항4호)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제4조3호) 대전사회복지관협회(제4조1항4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제4조5호) 대전사회복지사협회(제4조1호7호) 대전사회복지협의회(제4조8호)	=	대전복지재단 (제4조3호, 제4조9호)	

2) 재단은 현재 각 직능단체에서 수행해야할 고유직능별 교육사업, 컨설팅, 조사연구사업, 사회복지사 힐링프로그램 등을 직접 무료사업으로 실시함으로써 직능단체의 사업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 민간사회복지계에서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사회복지 대체인력지원센터’를 2016년부터 직접 수탁 운영하고, (사)대전지체장애인협회에서 수탁 운영하던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던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2018년부터 직접 수탁 운영함으로써 문어발식으로 민간직능단체의 사업영역을 침해하여 기능을 고사시키는 등 위기를 조장하고 있음.

3) 따라서, 대전복지재단을 관리하는 대전광역시의 주도를 통해 현재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직접사업을 민간사회복지 직능단체별 특성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전환하여 민간사회복지현장을 지원·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기능 중심으로 재편해야할 필요성이 있음.(표\_3. 참조)

□ 표\_3. 재단의 중복사업 중 직능단체 지원사업 전환을 위한 제안

대전복지재단 사업 중 (2018년 기준)	사업영역	세부사업내용	민간사회복지 직능단체 지원사업(안)
	조사연구사업	▶ 각 복지영역별 조사연구사업	▶ 주제 및 영역에 따라 각 직능 단 체별 직접추진 또는 공동추진 등  ex)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 장 기본계획 수립연구 =>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회복지시설 품질개선	▶ 사회복지시설 경영 및 자문 컨설팅	▶ 시설유형에 따라 해당 직능단체 에서 실시
	복지네트워크 활성화 및 사업발굴	▶ 사회복지 학습동아리	▶ 대상에 따라 각 직능단체별 지원
		▶ 사회복지포럼	▶ 포럼 주제에 따라 각 직능단체별 실시
	복지인력의 전문성 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	▶ 사회복지인력 전문교육	▶ 시설유형에 따라 해당 직능단체 에서 실시
		▶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	▶ 시설유형 및 대상유형에 따라 해당 직능단체에서 실시
		▶ 사회복지종사자 힐링사업 및 심리지원사업	

4) 또한,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한 20여 민간사회복지 직능단체의 활성화 및 기능회복을 가로막는 뿌리 깊은 고질적 문제는 만성적인 사업예산 부족(2018년 예산 기준, 재단과 대전사회복지협의회와 총 19배, 대전사회복지사협회와 총51배가 차이남)이며, 사업예산 부족은 각 직능단체별 전문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한계, 근무환경 저해, 전문인력 고용의 어려움과 직원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전문성 저하 등을 낳고 있음.

이는 지역사회의 현실적·시대적 욕구에 부합한 효과적인 복지사업 추진을 저해함으로써 민간사회복지 직능단체의 비정상화를 불러오는 악순환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각 직능단체별 고유목적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각 직능단체별 현황조사를 통해 부족한 사업비 및 운영비, 인건비 지원이 필요함.

## 정책수행과제

- 사회복지 직능단체의 고유목적사업 육성·지원 필요
  - ➡ 대전복지재단 사업조정 및 재편을 통한 직능단체 고유목적사업 육성·지원
  - ➡ 직능단체 사업 및 운영의 안정화를 위한 복지에산 지원



1. 현재 민간사회복지 현장이 대전복지재단을 앞세운 관 주도형 복지로 인해 점차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2018년부터 야심차게 시행하는 ‘사회서비스진흥원’은 점차 민-관 협치의 사회복지가 아닌, 관 주도형 복지시스템으로의 일방적인 전환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며, 이는 그 간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가 주장해온 민-관 상생이 더 이상 요원함을 의미함.

2. 급변하는 복지환경의 변화 속에 각 민간직능단체가 자립과 생존을 위한 자구책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는 한두 개 직능단체의 몸부림이 아닌 민간사회복지 생태계 복원과 활성화를 위해 전 직능단체의 단단한 연대와 네트워크,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가능한 상황이라 판단 됨.

따라서 쾌적한 사무실 및 전문교육장 등 사업공간 제공을 통해 각 직능단체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복지 정책개발, 사회복지 콘텐츠 개발, 공동사업추진을 통해 상생의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는 민간사회복지계의 독립적 공간으로써 ‘대전사회복지종합센터’가 매우 필요한 상황임.

3. 현재 대전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한 14개 사회복지 직능단체가 대전복지재단이 임대 운영하는 대림빌딩 7~10층 중 7~8층에 전전세 형태로 유료임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간의 한계로 인해 입주하지 못한 직능단체도 10단체가 있는 상황임.

특히, 재단이 관리하는 대림빌딩 9층의 강당 및 교육실을 현재 입주한 14개 직능단체 등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재단의 연중 자체사업이 우선 배정되는 200여일을 제외하고 남은 100여일을 입주단체가 나눠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기타 외부의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의 대관이 있는 경우엔 사용은 더욱 용이하지 못함으로써 지속적인 전문사업 추진에 막대한 한계가 발생함.

4.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김동섭 시의원에 의해 제기된 현 재단의 시민 혈세 낭비 지적(대전복지재단 입주건물 임차료(대림빌딩 7~10층/총 4개 층)가 보증금 16억원, 매년 월세 7억5천여만원이 지출되는 상황)과 제안(보증금 16억원을 포함한 연월세비용을 적절하게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원도심 건물매입이나 신축 등을 통해 혈세낭비를 예방할 것)이 있었던 만큼, 지금이라도 현재 대림빌딩 7~8층에 입주한 민간사회복지 직능단체가 독립된 신규 ‘대전사회복지종합센터’로 이전할 경우, 재단은 보증금 부담과 연월세비용을 절감하여 보다 재단의 고유성에 적합한 사업추진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직능단체 또한 독립적인 사업공간 확보를 통해 안정적이고 자립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기에 ‘대전사회복지종합센터’의 건립은 대표적 민-관 상생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됨

5. 타 광역시·도의 상황을 보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인천광역시를 포함하여 총 8개 광역시·도에서 민간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 지역의 민간사회복지 발전의 교두보로 활용하고 있음

□ 표\_4. 타 시·도 사회복지회관 운영 현황

시·도	운영 및 관리주체	건물규모	이용내용
중앙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상23층 지하7층	▶대회의실, 회의실, 전산교육장, 세미나실 등
광주광역시	광주사회복지협의회	지상2층 지하1층	▶전산실, 교육장, 회의실 등 ▶2개 사회복지단체 입주 중
인천광역시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시설관리공단)	지상7층 지하1층	▶교육장, 강당, 회의실, 전산교육장 등 ▶30개 사회복지단체 입주 중
강원도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	지상5층 지하1층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강당 등 ▶11개 사회복지단체 입주 중
경상남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지상3층 지하1층	▶사무실, 강의실, 강당, 상담실, 전산실 등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명예의 전당 등 ▶14개 사회복지단체 입주 중
충청북도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충북사회복지센터)	지상5층 지하1층	▶사회복지체험관, 회의실, 토의실, 전산실 등 ▶복지기기 판매 전시관 등 ▶15개 사회복지단체 입주
전라북도	전북사회복지협의회	지상5층 지하1층	▶사무실, 강의실, 강당, 전산실, 상담실 등 ▶7개 사회복지단체 입주
제주도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지상2층	▶2층 회의실, 교육장

6. 따라서, 민간사회복지 직능단체 등 20여 기관 및 관련단체가 모두 입주하여 각 직능단체별 고유사업을 활성화 하고 민간사회복지의 발전을 도모함과 더불어 민간 사회복지 기관 종사자 및 관계자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에 관심있는 대전시민 누구나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전만의 사회복지 거점으로써 ‘대전사회복지종합센터’의 건립이 매우 필요함

□ 표\_5. 대전사회복지종합센터 활용방안(안)

구분	활용방안	세부내용
대전 사회복지 종합센터	사회복지 직능단체 사무실 공간 제공	▶20여 사회복지 직능단체 입주 ▶기타, 사회복지 유관기관 입주
	민간사회복지 직능단체 네트워크 구축	▶민간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대 및 협의체 구성
	‘사회복지인 및 대전시민’ 전문교육장 활용	▶전문 교육장 및 강당 등 시설 제공 ▶전산교육장 설치 운영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교육 등)
	對 시민 사회복지 홍보관 조성	▶대전 사회복지 역사박물관 조성 ▶사회복지 명예의 전당 조성 ▶사회복지시설 등 생산품 전시관 및 판매 공간 제공
	기타, 사회복지 전문사업 추진	▶대전시민의 복지욕구 맞춤형 전문사업 개발 및 추진
	대전시민 복지정책 제안창구 개설	▶사회복지 관련 복지정책 제안을 위한 상시 창구 운영 등(홈페이지, sns 등)
	광역푸드뱅크 물류창고 활용	▶푸드뱅크 장기 보관물품 관리 ▶푸드뱅크 홍보관 운영

## 정책수행과제

### ○ 「대전사회복지종합센터」건립 필요

- ▶ 직능단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민간사회복지 발전의 구심점 확보  
(직능단체의 연대와 협력, 상생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 민간사회복지 직능단체의 쾌적한 사업 환경 조성  
(전문교육장, 강당, 사회복지 역사박물관 등 대전사회복지에 특화된 사업공간 조성)

### 현황 및 필요성

- 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조가 민관 협력이라기보다는 관중심의 일방적인 통제 또는 감독 기능에 초점이 놓여 있어 서비스 전달에서 많은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관의 통제 및 지도감독에서 벗어나 상호 지속적인 소통과 의사결정구조에서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되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민관협력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 또는 구 차원에서의 단일화된 조정기구 또는 협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봄.
-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기관들이 제출하거나 작성하여야 하는 서류에 대한 공동의 이해부터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민원 처리,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고충처리 등에 대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가 필요함.

### 제안내용

- 민과 관에서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가칭 ‘고충처리위원회’를 대전시 복지정책과에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해당 사무에 대한 구청 담당자도 참여하게 하여, 일방적인 지시 전달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노력으로 사회복지실천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와 고충을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함.
- 현재 시청에 설치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경우도 상시화 하여 최소 분기별 회의를 통해 처우개선의 진행 상황이나 예산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활동이 요구됨.

## 정책수행과제

- 단일화된 조정기구 또는 협의 기구 마련
- 가칭 ‘고충처리위원회’ 발족
  - 사회복지실천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와 고충 조정
  - 민과 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사결정구조에서의 참여를 보장 할 수 있는 협력 체계 구축

## 현황 및 필요성

1. [사회적 이슈 및 문제제기] 최근 우리사회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ME TOO’ 운동을 통해 여성 및 장애인 등 그간 인권 취약 지대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 사회적 권력으로 자행되었던 인권유린과 성범죄 등에 대한 고발 등을 통해 사회구조적 낡은 관행을 혁파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민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는 상황임.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충북 음성군의 한 장애인복지시설 관장 A씨가 5년간 여직원 20여명을 성추행한 사건이 신고되어 경찰수사가 진행되는 등 그간 암묵속에서 관행처럼 자행되어왔던 사회복지현장의 인권침해 등도 새로운 시각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더 이상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인권침해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의식전환에 따른 대책마련에 대한 시대적 욕구가 촉발되고 있음.

### 2. [법적인 근거]

가. 「UN 세계인권선언(1948)」에서 인권은 ‘인류사회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정의

나.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침해할 수 없는 기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

다. 「인권위원회법(2001)」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인권으로 규정

라. 상대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 사업대상인 사회복지현장의 특수성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2(기본이념) 제3항,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에서 인권을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와 제공받는 자 모두의 권리로서의 보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5조(인권존중 및 최대봉사의 원칙)에서도 사회복지사가 업무수행의 대상인 클라이언트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없이 최대한으로 봉사하도록 규정하여 클라이언트의 인권 존중 의무를 분명히 명시

마. 따라서 사회복지현장에서 인권보장 및 권익보호의 대상은 ‘서비스 제공자로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와 수혜자인 클라이언트 양측 모두’임을 알 수 있음

3. [대전시의 인권 인식] 대전시민의 인권보장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대전광역시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2016.12.30.)’를 제정하였으며, ‘대전광역시인권센터(2017. 9.)’ 설치운영 및 최근 대전시정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대전광역시 시민인권보호관(2018.4.)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정작 사회적 약자가 주 클라이언트인 업무현장에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인권침해 상황에 빈번하게 노출되어 있는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인권 및 권익보호를 위한 별다른 대안은 현재까지 없는 상황임.

그나마 최근 '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2017. 8.)'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권익과 인권보호를 위한 작은 움직임을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 전 분야를 망라하는 인권 보장체계 구축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며, 이에따라 작년 3월경 대전사회복지협의회에서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님께 드리는 건의서(2018. 3. 31)'를 통하여 '사회복지인권지원센터'를 제안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묵묵부답임.

#### 4. [선행연구 사례]

##### 가. '사회복지사'의 인권침해 선행연구

1) 「2015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르면,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43.2%가 이용객의 욕설과 폭언을 들은바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생활시설 사회복지사의 22%가 '클라이언트가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

2) 대전복지재단에서 실시한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연구(2017)」에 따르면, 응답자의 47.5%가 클라이언트로부터 폭력을 경험하였으며, 직접 경험은 없으나 목격한 경우도 16.7%로 나타나 종사자의 2/3 정도가 이용자로부터 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음. 이를 유형별로 보면, 유형별로 언어적 폭력이 73.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신체적 폭력 49.7%, 경제적 폭력 24.1%, 업무상 폭력 14.6%, 성적 폭력 12.5%로 나타남

3)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보건복지부,2013.)」에 따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99.2%가 동료와 상사, 민원인에 의한 폭언을 경험하였고, 신체적 폭행을 당하거나(19.2%) 성폭력 피해 경험(17.2%)이 있다고 답변하였음. 특히,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6.4%)의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10.5%)이 민원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가장 많이 경험하였으며, 이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성폭력 경험(3.8%)에 비해 최대 3배 이상임.

3-1) 특히, 사회복지사 인권침해가 '동료 및 상급자' 32.2%, '클라이언트' 67.8%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주로 클라이언트에 의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주목할 만한 점은 '동료 및 상급자에 의한 다양한 인권침해가 무려 30%'에 달한다는 것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안전장치가 사회복지시설 내·외적인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표\_6 참조)

□ 표.6. 사회복지사의 폭언,폭행,성희롱 경험(단위:%)

구분	인권침해 가해유형별 구분		
	동료로부터	상급관리자로부터	클라이언트(주민)으로부터
1) 폭언(언어)	6.4	13.3	28.9
2) 폭행(신체)	0.4	0.6	8.7
3) 성희롱 (성추행 포함)	1.7	2.7	6.4
4) 따돌림	3.7	3.4	1.1

3-2) 또한, 사회복지 현장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인권보장 수준도 평균 4.87를 나타내어 10점 만점에서 평균수준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 바, 이는 사회복지현장이 사회복지사에게 심각한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인권사각지대임을 알 수 있게 함.(표\_7.참조)

□ 표\_7. 사회복지사의 인권 보장 수준

사회복지사 유형	구분	인권 보장 수준	비고
민간사회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이용시설	5.66	1~10점에 서 10점에 가까울수록 인권보장 수준이 높은 것임
	생활시설	5.69	
	협회,재단,단체	5.47	
	학교	4.74	
	평균	5.39	
사회복지 공무원	시,도,군,구청	4.64	
	읍,면,동,기타	4.03	
	평균	4.34	
인권보장 총 평균		4.87	

4) 「사회복지사 통계연감(한국사회복지사협회,2015.)」에 따르면, 피해경험자의 단 6%만이 적절한 조치를 받았고 80% 이상의 피해경험자들은 기관이나 가해자에 대해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은 채 ‘참고 넘겼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전복지재단에서 실시한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연구(2017)」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폭력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을 보면 신체적 폭력 64.1%, 언어적 폭력 59.8%, 경제적 폭력 52.2%, 성적 폭력 37.5%의 순으로써 직접적인 폭력피해자 중 상당수가 보고를 하지 않고 적절한 대응을 받지 못함을 알 수 있음.

따라서, 클라이언트 뿐만 아니라 기관 내 직원 및 상급자간의 관계 속에서도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침해가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며,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관의 이미지 실추 및 가해자인 클라이언트와의 민원발생 등을 우려한 기관과 직장 동료들에 의해 암묵적인 침묵이 강요됨으로써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매우 큼.

## 나.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인권침해 선행연구

1)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등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유형은 노동력 착취, 신체적·언어적 폭력, 강제구금, 종교강요, 교육의 제한, 성폭력 등 전반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인권침해 사례가 많은 상황임.

대표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인권실태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예를 제시하자면,

12년간 무려 531명이 사망하였던 1987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필두로 하여 1996년 ‘평택 에바다’ 사건, 2003년 ‘성실정신요양원’과 ‘은혜 사랑의집’ 사건, 2005년 ‘광주 인화학교 사

건' 및 '심신수양원'과 '바울선교원' 사건, 2006년 '성람재단' 사건, 2008년 '석암재단' 사건, 2006년 '김포사랑의집'(경기도 김포시), 2007년 '전북영광의집', 2010년 '전북사랑원' 사건, 2011년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광주인화학교', 최근 생활재활교사 16명이 거주장애인 23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2016년 남원 평화의 집 등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억압과 착취 및 성폭력 및 폭행사건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행태도 전국적으로 유사하고 광범위하며 보편적인 경향을 띠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2) 「사회복지시설 평가(보건복지부,2013~2015)」를 보면, 아동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대상기관 총 1,881곳 중 '이용자 인권침해'로 총 13개 기관이 소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사업정지, 시설장교체,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에 따른 평가 최하위인 F등급을 받았으며, 그외 인권침해에 대한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6개 시설은 평가등급 자체가 보류된 것으로 파악되었음. 또한, 장애인복지관 및 정신요양시설 등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평가(보건복지부,2014~2016년)」에 따르면, 평가대상 660곳 중 53곳(8.0%)가 최하위 D, F 등급을 받았으며, 이 중 입소자 인권침해 등으로 등급 보류를 받은 시설이 5개소(0.8%), 이 중 3곳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조사됨.

3)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현황(보건복지부,2016)」에 따르면 2014년부터 2년 간 857곳의 장애인거주시설 중 약 10%인 91개 시설에서 120건에 달하는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2011)」의 조사 발표에 의하면,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사건 중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다수인 보호시설의 인권침해 관련 진정은 전체 진정건수 중 총 12.7%를 차지하며, 이 중 형사고발 조치까지 이른 것은 총 49건으로 인권위 전체 고발(63건)의 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4) 따라서,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의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들의 비호와 묵인, 방치 속에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가 매우 심각하고 다양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권보장체계가 부재한다는 것을 방증함.

**5. [대전시의 사회복지 인권지원 대상 현황]** 현재 대전광역시의 700여 민간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2,700여명(장기요양시설 종사자 포함시 약 4,000여명)이며, 5개 구청 및 시청을 포함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550여명임. 또한, 「제3기 대전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대전광역시,2015~2018)」을 근거로 복지영역별 대상자별 현황을 보면, 보육(6.9%), 아동 및 청소년(16.3%), 노인(9.8%), 저소득층(5.5%), 장애인(4.7%) 등 대전광역시 인구 수 대비 총 43.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를 종합하면, 약 4,500~5,000여명의 민-관 사회복지사가 대전시민150만 중 저소득층·장애인 등 66만 복지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현장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으며, 갈수록 사회복지 업무현장의 전문화·세분화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사회복지현장의 인권침해 상황은 묵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6. [타 시·도 인권지원센터 현황]** 충청북도에서는 충북사회복지센터 내 「충북사회복지인권지원센터(2014.7.)」를 개소하여 운영중이며, 제주특별시에서는 제주사회복지협의회 내 「제주인권사랑방(2015.6.)」을 운영함으로써 사회복지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인권보장 및 권익보호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음.

또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와 87개 기초지자체가 ‘주민 인권보호·증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는 중요한 가치를 바탕으로 각 지역에 맞는 인권조례를 제정 및 운영함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인권센터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임.

## 제안내용

**1. [대전 사회복지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이를 통해 그동안 묵묵히 대전시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악한 근로조건과 근무환경에서 헌신과 봉사정신으로 일해온 수많은 민-관 사회복지사들이 오히려 권리와 인권에 역차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타개하고, 당당한 권리의식과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의 발전과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및 클라이언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복지 인권보장 체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대전사회복지인권지원센터」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

**2. [대전사회복지인권지원센터 활용방안]** 따라서, 사회복지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대전사회복지인권지원센터」의 활용방안(안)은 아래(표\_8)와 같다.

□ 표\_8. ‘대전사회복지인권지원센터’ 활용방안(안)

구분	활용방안	세부내용
대전사회복지인권지원센터 (가칭)	인권상담 및 법률지원	▶ 사회복지 현장의 인권침해사례 발굴 및 상담, 법률 지원 등 ▶ 상시적 인권상담 시스템 구축(온라인 상담 등)
	인권보장네트워크 구축	▶ 인권보장을 위한 전문가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 ▶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공동대응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제안 등
	인권교육 실시	▶ 맞춤형 인권교육 실시 ▶ 찾아가는 인권교육 실시 ▶ 사회복지 기관별 인권보장 컨설팅 실시
	인권권리의식 개선 캠페인 실시	▶ 인권에 대한 권리의식 개선을 위한 포럼, 캠페인 등 실시 ▶ 인권관련 토크콘서트 등 실시
	인권보장 매뉴얼 제작	▶ 인권침해에 따른 사례별 대응매뉴얼 제작 및 배포

## 정책수행과제

○「대전사회복지인권지원센터」설립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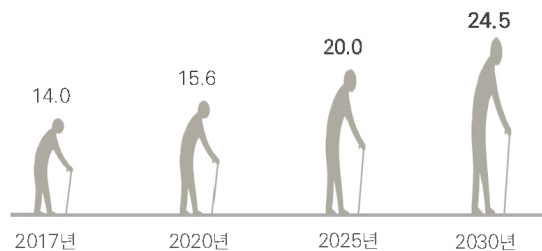
- ➡ 대전사회복지현장의 인권보장을 위한 안전망 구축
- ➡ 대전시 700여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근무자 및 클라이언트의 인권보장  
(사회복지사 및 클라이언트, 기타 사회복지 관계자 등 사회복지 현장의 포괄적 인권 및  
권리 보장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1. 대전광역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8년 3월 현재 대전광역시 전체인구의 12.21%에 이르고, 2024년에는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가 도래한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182,965명 중 장기요양등급노인<sup>1)</sup>(65세 이상 2018.03월말 기준 인정률 9%), 재취업,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을 제외한 대다수의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고 있다. 결국 대부분의 노인은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른바 “Ageing in place-거주 지역 중심의 건강한 노후생활 기반 마련”을 지향한다. 따라서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어르신이 지역사회 안에서 행복한 노후를 살 수 있도록 돕는 노인 복지서비스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 ■ 고령사회, 대한민국

- 한국, 2017년 8월, 고령사회로 진입
- 2025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 예정
- 2030년에는 노인이 24.5%, 2060년에는 42.5%
- 80세이상 노인인구 ('17)153→('25)246(만명)



(출처 : 통계청, 2015~2065년 장래인구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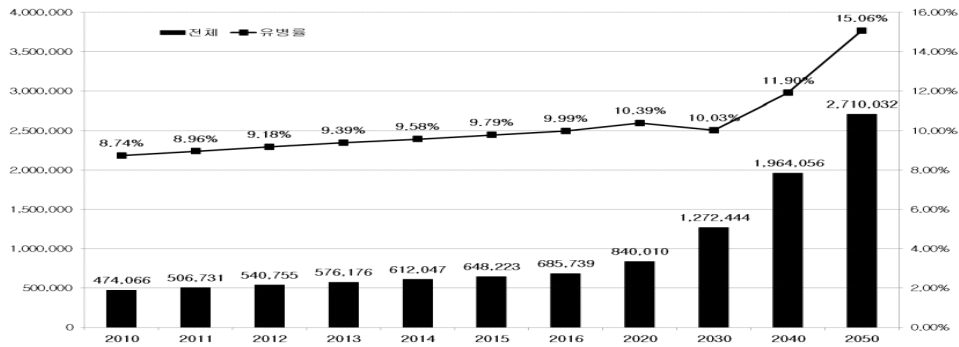
### 한국은 고령화 속도 세계 최고

	고령화	고령	초고령	소요연수(고령화▶고령▶초고령)
한국	2000	2017	2025	25년
일본	1970	1994	2003	36년
독일	1932	1972	2009	77년
이탈리아	1927	1988	2006	79년
미국	1942	2015	2036	94년
프랑스	1864	1979	2018	154년

(출처 : 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1)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은 요양시설 84.3%, 주야간보호시설 63.5% 등으로 9%의 등급 내자 노인도 평균 30%이상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않고 지역 사회 안에 거주하고 있다.

## 한국의 치매 환자수 및 유병률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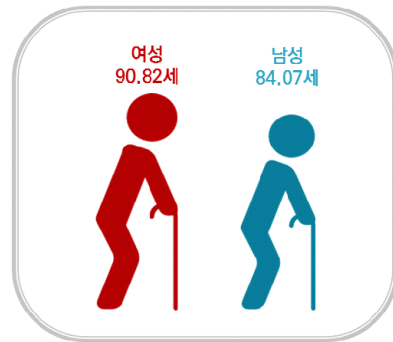


(출처 : 보건복지부, 전국치매역학조사(2012년))

### ■ 기대여명의 증가, 치매노인의 증가 ?

- 2030년 기준, 여성은 90.8세, 남성은 84.1세로 기대여명이 세계 1위로 추계.
- 기대여명의 증가는 치매를 포함한 노인성 질환을 가진 돌봄과 요양 필요도가 높은 노인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함.

한국인 기대여명: 세계 1위 (추정)



(출처 : 세계보건기구(WHO), 2030년 기준)

2. 보건복지부는 2018년 3월,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자신의 집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가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 추진을 올해의 핵심과제로 정했다.

## 기대효과

- 현재 14개소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기능을 확대한 14개소의 재가노인생활안심센터가 설립되면,

### 1. 지역사회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노인이 지역사회와 자신이 살던 집을 중심으로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시설이 아닌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수행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게 된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지역 내 사각지대 노인(우울증, 고독사 위험, 자살위험군 등)을 발굴하고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 노년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Ageing in place-거주 지역 중심의 건강한 노후생활 기반 마련”을 실현한다.

## 2. 거주 지역 중심의 사회안전망 구축

노인이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또 가능하면 자기가 살던 집에서 최후의 순간까지 안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ageing in place) 돕는 재가노인생활안심센터는 지역에서 대상자의 포괄적인 요구를 유연하게 충족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강점은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대시켜 바람직한 지역사회 케어가 실현되도록 한다.

## 3. 지방자치단체(국가적) 재정 절감(사회적 비용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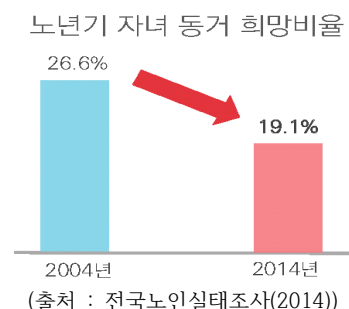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예방적 복지사업을 통해 노인의 건강악화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노인들의 사회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시기를 늦춰 사회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시 발생하는 부담금을 절감시킬 수 있다. 특히 대전광역시 5개 구에 있는 14개소의 기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강화하여 재가노인생활안심센터가 설립하게 되면 예산과 행정적인 면의 효율성이 매우 높다.

## 4.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는 정책은 재가중심을 통한 지역사회복지체계를 구축하고 대전광역시의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여 6년 내에 도래하는(고령사회 2024년, 초고령사회 2030년)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다.

### ■ 공적 돌봄 서비스 욕구 증가

- 독거노인, 노인부부 가구의 증가  
: 독거노인, 전국 7.1%(2018년), 전남 13.7%,  
(대전, 2018년 3월) 노인인구 12.2%
- 가족부양의식 약화로 가족내 돌봄 감소
- 베이비부머의 고학력, 고소득 노인들의 증가로 양질의 돌봄 및 요양서비스 욕구 증대



## 정책수행과제

1. 대전광역시의 14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하는 재가노인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 Care)를 위한 재가노인생활안심센터 설립

2.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노인이 지역사회와 자신이 살던 집을 중심으로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시설이 아닌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며, 동시에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최 일선의 사회복지기관이다. 따라서 별도의 센터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인적구성과 기능을 확대하여 <재가노인생활안심센터>를 만들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여,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대전광역시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3. 현재 대전광역시에는 14개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있으며, 1개소 당 3명의 종사자가 80명~100명의 지역사회 취약 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는 이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1994년 이후 현재까지 지역사회 내에서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해 온 내용이다. 따라서 14개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인적구성을 확대하고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재가노인생활안심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대전광역시의 커뮤니티 케어 실현과 취약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안전망이 더욱 견고해 질 수 있다.

### 4. 인력구성(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 생활밀착형 통합 재가노인생활안심센터)

구분	기존인력(3명)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확대인력(7명) <재가노인생활안심센터>	추가인력(4명)
인력구성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사무원 1명	시설장 1명 <u>사회복지사 2명</u> <u>간호사 1명</u> <u>방문요양보호사 2명</u> 사무원1명	사회복지사 1명 간호사 1명 방문요양보호사 2명



2018. 6.13지방선거  
「복지도시대전만들기공동행동」

‘사회복지 관련(직능)단체  
복지정책제안서’

## 사회복지 관련(직능)단체 정책제안표 [무순]

구분	단 체 명	제안정책	제안사유	비고
1	대전광역시 시니어클럽협회	가. 시니어클럽 건물 신축 및 무상임대 추진	■ 임대료 절약으로 직원 처우개선 및 일자리사업 활성화	
		나. 시니어클럽 분관 개설	■ 분관 개설을 통한 복지 접근성 향상	
		다. 사회복지종사자 수당 인상	■ 시설근무자의 처우개선	
		라. 노인일자리생산물 및 서비스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	■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판로개척 및 활성화	
2	대전광역시 정신재활시설협회	가. 정신재활시설의 중앙환원	■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탈원화 환경 조성	
		나. 정신재활시설 활성화 대책 마련	■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 등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 마련	
		다.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내 정신재활시설의 포함	■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지역복지서비스 체계 내 실행주체 명확화	
		라. 지역사회 거점 정신재활시설을 통한 복지서비스 지원	■ 복지서비스 지원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현실화 추진	
3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대전지회	가. 정신요양시설 임금과 생활시설 임금의 동수준 책정	■ 정신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나. 종사자 시간외근로수당 현실 반영		
		다.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현실 반영		
4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대전광역시협의회	가. 보편적 권리 주체로서의 아동권리	■ 나 홀로 아동의 안전한 돌봄을 위한 방안 마련	
		나. 양질의 아동복지 제공	■ 이용아동들의 질높은 복지서비스 제공	
5	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대전지회	가. 종사자 배치기준 준수	■ 장애인의 개별화 서비스 등 제공을 위한 합당한 인력배치 시급	
		나. 인건비 지급기준 준수	■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다. 운영비 예산 현실화	■ 사업의 전문성 강화	
6	대전재가노인복지협회	가. 소규모(5인이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현실화	■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나.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생활밀착형 통합 재가노인생활 안심센터 설립	■ 고령사회 진입 및 노인세대 증가에 따른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우선정책 의제6
7	대전광역시 교육복지시협회	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확대 및 교육복지사 전면배치	■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체계적으로 취약 계층 아동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필요	
8	대전지역자활센터협회	가. 자활사업을 위한 필수공간 지원 및 운영 지원	■ 자활사업의 안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공간 확보	



## 사회복지 관련(직능)단체 정책제안표 [무순]

구분	단 체 명	제안정책	제안사유	비고
9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대전노인복지협회	가. 요양원 이용시 본인부담금 상한액 설정 및 초과금 지원	■ 전국 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전, 대전시 차원에서의 선보완 필요	
		나. 요양원 입소 이용자에 대한 사회서비스 바우처 확대	■ 요양원 입소로 인해 제한받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확대로 입소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	
		다. 요양원 종사자 처우개선	■ 요양원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처우개선	
10	대전아동복지협회	가. 아동생활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준수	■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종사자의 처우 개선	
		나. 시설아동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예산 배정	■ 퇴소 아동의 자립역량 지원	
		다. 시설별 심리치료 및 상담비 예산 반영	■ 입소 아동의 심리치료 지원	
11	장애인직업 재활시설협회	가. 일하는 근로장애인의 최저임금보장을 위한 근로수당제도 도입	■ 근로장애인의 노동에 따른 수당 지급	
		나. 규정에 맞는 운영비 지원	■ 시설운영의 안정화 도모	
12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	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급식종사자 지원	■ 급식조리사의 안정적 수급을 통한 아동 급식의 질 향상	
		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증액 및 차등지원	■ 종사자처우개선비 인상 및 차등지원방안 모색	
		다.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건강 도모를 위한 공기청정기 지원	■ 아동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	
		라. 온 마을 돌봄의 시작 'Onestop Childcare'	■ 동일지역내 아동보호를 위한 민-관 전문체계 구축	
13	대전공동생활가정	가.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 처우개선	■ 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의 급여 및 수당 개선	
		나. 형평성 있는 점검 시행	■ 1인사업장의 특성별 행정감사 필요	
14	대전참여자치 시민연대	가. 대전시민복지기준선 실행을 위한 제도 구축	■ 대전시민의 인간다운 삶 보장	
15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	가. 대전시민복지기준선 재정립 및 이행체계 수립	■ 시민복지기준선 전면 재검토를 통한 대전시민의 복지적 삶 지원	우선정책 의제1
		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한 '단일노동 단일임금' 등 종사자의 처우 개선 필요	우선정책 의제2
		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여건 및 환경개선	■ 사회복지사의 업무환경 개선	
		라. 사회복지전달체계 민관 협력 강화	■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단일화된 조정기구 마련	우선정책 의제4
16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가. 사회복지직능단체 기능정상화	■ 민간사회복지 직능단체의 고유목적사업 육성 및 지원 ■ 대전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	우선정책 의제3
		나. 대전사회복지인권지원센터 설립 추진	■ 사회복지현장의 인권보장을 위한 안전망 구축	우선정책 의제5

## I. 대전광역시시니어클럽협회

### 정책제안 1. 시니어클럽 건물 신축 및 무상임대 추진

#### 제안사유

- 임대료 절약으로 직원 처우개선 및 일자리 활성화

#### 제안내용

○ 시니어클럽은7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공익활동,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 다양한 유형의 노인일 자리를 수행하고 있지만 건물 지원이 없어 건물을 임대하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특성상 사무실 이외에 교육장과 작업장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어 운영비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이로 인해 매년 인건비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며 직원들의 인건비 인상이나 처우 개선이 어렵다.

이에 시니어클럽도 다른 사회복지시설처럼 건물 신축지원과 무상임대를 통해 고령 사회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일자리 사업 확대에 기반 구축이 절실하다.

### 정책제안 2. 시니어클럽 분관 개설

#### 제안사유

- 분관 개설을 통한 복지 접근성 향상

#### 제안내용

○ 대전지역은 자치구마다 하나의 시니어클럽이 운영되고 있다. 지역별로 교통불편 등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 노인의 복지혜택 확대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니어클럽 분관 개설이 필요하다.

### 정책제안 3. 사회복지 종사자 수당 인상

#### 제안사유

- 사회복지 종사자 수당 인상을 통한 처우 개선

#### 제안내용

○ 사회복지 종사자 수당이 지난 7년간 10만원으로 동결돼 왔다. 열악한 여건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종사자 수당을 30만원 수준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규직 사회복지사 이외에 계약직인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전담인력들도 종사자 수당 지급을 통한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

### 정책제안 4. 노인일자리 생산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

#### 제안사유

-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판로개척 및 활성화

#### 제안내용

○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조례」 안에 “노인생산품 우선 구매 및 구매촉진”과 관련한 조례가 있지만 생산품만 명시되어 있으며 서비스에 대한 구매는 제외되어 있다. 또한 노인일자리 생산품 우선 구매와 관련하여 집행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대전시 산하 공사나 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노인일자리 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노인일자리 서비스 우선 구매 촉진에 대한 조례 제정과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시 산하 관공서나 공공기관 평가시에 노인일자리 생산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한다면 판로 개척이 쉽지 않은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 II. 대전광역시정신재활시설협회

### 정책제안 1. 정신재활시설의 중앙환원

#### 제안사유

○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내 사회통합을 추구하고 있으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와 사회적 편견, 그리고 넘비현상으로 인한 시설 설치의 어려움은 물론, 기존 시설의 폐쇄에 대한 우려까지 발생하고 있음.

번호	지역	시설현황		번호	지역	시설현황	
		개수	비율(%)			개수	비율(%)
1	강 원	5	1.5	10	세 중	2	0.6
2	경 기	45	13.4	11	울 산	2	0.6
3	경 남	4	1.2	12	인 천	12	3.6
4	경 북	16	4.7	13	전 남	4	1.2
5	광 주	10	3.0	14	전 북	21	6.2
6	대 구	18	5.3	15	제 주	3	0.9
7	대 전	30	8.3	16	충 남	25	7.4
8	부 산	12	3.6	17	충 북	13	3.9
9	서 울	117	34.7	계		337	100

[자료: 보건복지부 정신재활시설현황 2016.12.31.]

○ ‘정신재활시설’의 지역편중비율은 무려 51.6%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외의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예산사정으로 인해 시설이 설치되어도 예산이 지원되지 못하거나 법적인력을 충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3개분야」사회복지사업 중앙환원은 2008년 4월 ‘감사원’의 결과보고 및 2013년 4월 안전행정부 업무보고에 의한 「중앙정부의 정책과 밀접한 관계성」,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 「특정지역으로 편중된 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해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이 지방이양사업에서 중앙사업으로 환원이 추진됨.

○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외면과 그들에 대한 혐오성, 그리고 사회의 전반적인 편견이 개선이 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지

방이양사업은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3개분야」와 함께 중앙으로 환원되어야 함.

## 제안내용

○ ‘정신재활시설’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밀접한 관계성»,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 「특정지역으로 편중된 사업」에 따른 중앙환원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함

○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하여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탈원화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정신재활시설’의 확충을 위한 국가적 책임이 무엇보다 필요함. 또한, 사회적 편견에 기인한 지역사회의 턱없이 부족한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마련과 재활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국가적 탈원화 전략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의 재정지원이 필요함.

## 정책제안 2. 정신재활시설 활성화 대책 마련

### 제안사유

○ 2016년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평생유병률은 25.4%(男 28.8%, 女 21.9%)로, 성인 4명중 1명이 평생 한번 이상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하고 있음.

○ 정신질환의 일년 유병률은 11.9%(男 12.2%, 女 11.5%)로, 지난 일 년 간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한 사람은 47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2016년 보건복지부 개정 「정신보건법」 주요내용 중 중증정신질환자의 추정수를 전국민의 1%(50만명)로 추정하고 있음.

○ 2016년 12월 현재 전국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신재활시설의 정원은 7,081명이며, 전국민의 1%(50만명)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추정할 경우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은 중증정신질환자 대비 1.4%이며, 이마저도 정신재활시설이 수도권에 집중(51.6%)된 상태임.

2016년 12월 대전광역시 성인인구 중 치료 및 재활이 요구되는 정신병적장애 7,012명(0.6%), 정신분열성장애 2,337명(0.2%), 기분장애 87,654명(7.5%), 주요우울장애 78,304명(6.7%)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부족한 상태임.

[2016년 보건복지부 정신재활시설 정원현황]

구분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강원	경북	경남	세종	제주	계
정원	234	420	220	795	442	464	197	70	325	404	616	70	63	391	120	30	100	708

(\*2017년을 기준으로 대전의 정원은 459명)

[2017년 대전광역시정신재활시설협회 정신재활시설 유형별 시설현황 30개소]

구분	주간재활 시설	입소생활 시설	지역사회 전환시설	종합시설	공동생활 가정	직업재활 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아동·청소년시설
개수	5	2	0	2	21	0	0	0

또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병원에서의 탈원화는 용이해졌으나, 원가정이나 지역사회로 돌아갈 곳이 없는 정신질환자는 병원에 자의로 입원하거나, 노숙인으로 전락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음.

## 제안내용

○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을 지도하는 시설로 지역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함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에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내에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지역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정신재활시설’의 대폭적인 확충과 균형적인 유형별 시설 설치를 위한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정책제안 3.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내 정신재활시설 포함

### 제안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복지서비스 명문화에 따라 지역사회내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수요의 증가와 다양성을 요구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질적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지역사회내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례관리 미흡으로 정신질환자의 서비스 수요 증가는 고사하고, 정신질환자의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태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치료 및 사전예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는 ‘강남역 살인사건과 문지마 폭행’과 같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로 연결되는 사회적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

○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 사고 발생시 모든 정신질환자의 문제로 오도되고, 사회적 편견을 가중시키고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을 제시하거나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지역사회에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파악과 정신질환으로 인한 문제에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기인하고 있음을 간과하기 때문임.

○ 기초단위의 통합사례회의는 가정방문에서 사례관리까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수 있으며, 위기사례에 대한 통합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찾아가는동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등 기초단위의 사례관리시 정신재활시설과의 연계 및 정신건강전문인력이 포함되지 못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없음.

또한, 지역사회내 복지서비스 영역에서의 ‘정신재활시설’의 존재감 부족으로 인하여 지역사회내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비전문적인 접근과 지속적이지 못한 분절된 복지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제안내용

○ ‘정신재활시설’은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지역복지서비스체계내 사례관리의 파트너로서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의 적극적 실행주체로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함께 참여해야 함. 이를 통해 타복지영역간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자원발굴 및 연계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음.

## 정책제안 4. 지역사회 거점정신재활시설을 통한 복지서비스 지원

### 제안사유

○ 지역사회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수요와 욕구에 대해 ‘정신재활시설’의 인프라 부족에 따른 최소한의 복지서비스 제공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일년간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한 사람이 470만명으로 추산되고, 50만명정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는 7,081명으로 이들에 대한 사각지대와 복지서비스 제공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태임.

○ 대전광역시에서도 정신재활시설 유형 중 지역사회전환시설 및 중독자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시설은 전무한 상태임. 다양한 유형의 ‘정신재활시설’이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정신재활시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없거나, 지역내 님비현상과 예산확보가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신재활시설’의 운영에 의지가 매우 부족한 상황임. 더욱이 지방자치단체가 기초단체와의 복지예산 분담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의 양극화 현상이 지자체에서 기초단체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임.

○ 더욱이 정신재활시설을 통해 대인관계 및 일상생활기술훈련을 습득하고, 지역사회 내 영구임대아파트나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독립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과 이미 독립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있으나 이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대책은 전무한 상태임.

### 제안내용

○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독립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과 이미 독립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복지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 ‘거점 정신재활시설’ 지정하고 이를 통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현실화하여야 함.



### Ⅲ.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대전지회

#### 정책제안 1. 정신요양시설 임금과 생활시설 임금 동 수준 책정

##### 제안사유

○ 정부는 사회복지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수차례 되풀이 하였으나 아직도 정상적인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설별 형평성에 맞도록 운영되어 있지도 않음.

따라서 공무원 수준의 처우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공약실천이 되어야 하며 당 직능단체시설과 동급직종 시설과도 형평성이 맞도록 처우 개선이 요망됨

##### 제안내용

○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중 동 직종으로 분류되는 정신요양시설의 임금 책정과 사회복지시설 생활시설의 종사자 기본급 수준의 격차를 조정키 위하여 지자체에서 특별수당 등의 조정 편성으로 보완을 요함.

##### <요양시설과 생활시설 비교현황 “예”>

- 정신요양시설 종사자(원장기준)기본급(2017년 기준)
  - ☞ 1호봉2,141천원, 15호봉3,513천원, 30호봉4,208천원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원장기준)기본급(2017년 기준)
  - ☞ 1호봉2,397천원, 15호봉3,887천원, 30호봉4,657천원

<근거자료> 2017년 정신건강사업안내(보건복지부) 219쪽 및 275쪽 참조

#### 정책제안 2. 정신요양시설 시간외근로수당 현실 반영

##### 제안사유

○ 사회복지종사자의 근로시간은 주간근로자 근로기준법상 주40시간 근로(주5일근무)를 기준하나 정신요양시설은 주.야 365일중 일일 2교대제로 근로기준법상 주40시간외 급

여지급 가능 시간은 시간외근로시간으로 급여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급여지급이 불가능한 남은 시간외근로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시설의 환경 상 제한된 시간과 공간적인 이유로 인해 휴게시간을 보장할 수 없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근로시간에 대해 시간외근로수당을 지원하고자 정책수립이 요구됨.

## 제안내용

○ 정신요양시설의 2018년 현재 시간외 근로자에 대한 현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시간외 근로시간(수당 지급시간)을 변경 제안함.

	현 재	변 경
○ 병동근무자(2교대제)	월35시간	월48시간
○ 주간근무자 (토,일,공휴일근무)	월20시간	월24시간
○ 시설장 (야간 및 휴일 지휘감독 책임수행)	월 0시간	월20시간

○ 수당지급 : 지자체 특별수당으로 보완

## 정책제안 3. 정신요양시설 처우개선수당 현실반영

### 제안사유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신설이 필요한 수당으로는“급량비”와 “차량유지비”를 지급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비과세 혜택의 적용이 필요함. 왜냐하면 기초적인 의식주의 급식과 시설종사자의 자가 차량을 이용한 업무지원 및 프로그램 지원등의 현실적인 차량지원유지비의 적용이 필요함.

### 제안내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체계에 “급량비”와 “차량유지비”항목을 넣어 종사자 근로소득연말정산시 비과세 혜택 적용이 가능하도록 조정이 필요함.

## IV.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대전시협의회

### 정책제안 1. 보편적 권리 주체로서의 아동권리 보장

#### 제안사유

- 나 홀로 아동의 안전한 돌봄을 위한 방안

#### 제안내용

- 모든 아동의 입소가 가능하도록 입소조건을 완화
  - ☞ 보편적 복지가 가능케 한다
-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통합적 아동보호
  - ☞ 아동학대 예방 및 발견시 신속대응 조치

### 정책제안 2. 양질의 아동복지 제공

#### 제안사유

- 이용아동들의 질 높은 복지 서비스 제공

#### 제안내용

- 아동의 전인적 성장 위한 프로그램 지원
- 교재 교구 및 기자재 지원(예:예체능 부분, 휴식 및 쉼터 제공)
- 이용 아동의 생활지원, 보호프로그램 확대(아동건강검진, 소독서비스 지원, 친환경 급식 식자재 제공을 위한 급식비 상향조정, 안전점검비, 이용아동의 주거개선 사업)

## V. 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대전시지회

### 정책제안 1. 종사자 배치기준 준수

#### 제안사유

○ 대전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배치 현황은 평균 3.5명이다. 이는 보건복지부 지침(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기준 6.2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전국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배치 현황인 4.3명과도 차이가 있다. 대전과 인구 규모 및 시설 이용 장애인의 수가 비슷한 광주의 경우 평균 종사자 7명을 유지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이용자 증원에 대한 추가인력배치는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최소인력배치 기준(3명)이 지켜지지 않아 1, 2명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도 있으며, 이러한 인력부족으로 인해 입소 희망자들의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 점차 성인장애인의 주간보호센터 수요가 늘어나면서 조리원, 사무원과 같은 기능직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지만 종사자가 부족하여 사회복지사들이 이러한 역할까지 함께 하고 있다. (\* 참고자료 : 2018년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정기총회 및 시설장대회' 중 「2017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실태조사」 결과보고 인용)

○ 따라서, 중증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주간보호시설에서, 인력의 부족은 서비스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게 된다. 소규모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사회장애인의 개별화 서비스 제공 및 사회통합을 위해 배치 기준에 합당한 인력 배치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 제안내용

○ 보건복지부 종사자 배치기준 준수

☞ 보건복지부 지침 : 시설장 1명, 사회재활교사(이용자 4인당 1인), 기능직 1인  
: 최소 이용인원 10명일 때, 최소 종사자 3명  
: 이용인원 15명 초과시, 이용자 4인당 1명 추가 배치

## 정책제안 2.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준수

### 제안사유

○ 현재 대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시설장 급여 기준은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사회재활교사(일반직) 3급, 종사자 급여 기준은 4급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호봉승급만 있을 뿐 직위 승급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 보건복지부 지침(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서는 시설장은 관장, 사회재활교사는 3급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2017년도 진행된 전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 표본조사에서도 시설장의 경우 관장(41%), 1급(11%), 2급(24%)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회재활교사의 경우 3급(59%), 4급(24%)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대전의 지급기준이 보건복지부 지원 기준 및 타 시도보다도 많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급여 수준의 차이는 주간보호시설의 근무 경력이 많아질수록 점차 커지게 된다. 이는 소규모 시설 종사자들의 근무 사기에 큰 영향을 주게 되어, 장기근속자의 비율이 낮아지거나 소규모 시설을 기피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 제안내용

○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원 기준 준수(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시설장: 관장, 사회재활교사 3급, 기능직 4급

○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마련 (직위 승급)

### 정책제안 3.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예산 현실화

#### 제안사유

○ 현재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보조금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분리되어 지원되고 있으며, 2018 대전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연 평균금액은 7,378천원으로 조사되었다. 월평균 616천원이다. 시설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월평균 수준보다 훨씬 낮은 지원을 받는 시설들도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지원기준의 5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2017년도 진행된 전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 표본조사와도 차이가 있다.(천만원 미만으로 지원받는 기관은 전국 표본조사 중 43%)

○ 현재 지원되는 운영비는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시설유지보수, 차량유지 등과 같은 기본적인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다. 때문에 이용자들을 위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후원금 모집, 외부 지원사업, 이용자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 주간보호센터의 역할이 단순한 보호의 영역을 넘어 좀 더 전문화된 영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용자분들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가 요구된다.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

#### 제안내용

○ 보건복지부 운영비지원기준 준수(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시설당 기본지원 15,300,000원 , 인원 가중지원(15인 초과) 128,000원

○ 시설 특성에 맞는 운영비 지원 기준 마련 ( 중증장애인 이용시설, 시설규모 등)

## Ⅵ. 대전광역시재가노인복지협회

### 정책제안 1. 소규모(5인이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현실화

#### 제안사유

- 대전시 보조금(100%) 지원시설과 보건복지부 지원(매칭펀드) 시설간의 처우 차별 금지를 통한 사업의 안정성 확보

#### 제안내용

○ 대전시 소재 사회복지시설간의 종사자 처우가 부익부 빈익빈으로 갈려져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시설 종사자 간의 위화감을 조장하고 있음.(대전시 담당부서 공무원들의 인식문제, 담당부서별로 처우개선 협의⇒대전시 교섭창구 일원화)

○ 현 문재인정부에서 추진 중인 헌법 개정내용에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노동가치를 인정하고 정부의 의무사항으로 개정 추진되고 있는 바, 지방정부에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법 개정 정신을 반영해야 함.

-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지난 2014년 10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아래 사회복지사처우법)에 사회복지사의 직무상 권리와 신분 보장, 적정한 보수 수준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음.

구체적인 권고 내용은 법 시행령에 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지자체가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라고 권고했으며, 또한 광역자치단체 장에게도 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고 권고하였음.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의무화가 필요하며, 각 구 소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5개 구청 예산 지원안 마련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필요

## 정책제안 2.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생활밀착형 통합재가노인생활 안심센터 설립

### 제안내용

- 우선정책의제 6(22P) 참조



## VII. 대전광역시교육복지사협회

### 정책제안. 초등학교 內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확대 및 교육복지사 전면배치

#### 제안사유

○ 대전은 초·중·고등학교가 총 298개교(초 148교, 중 88교, 고 62교)이며, 이 중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통해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는 45개교로 전체학교의 약15%에 해당합니다. 이는 타시도(대구 33%, 광주 28%, 부산·인천 23% 등)에 비해 낮은 비율입니다.

또한 위 통계 수치로 알 수 있듯이 일반학교에 다니면서 경제적,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은 오히려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결국 교육복지 서비스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초등학교(전체 148개교 중 교육복지사업학교 20개로 13%해당)에서 교육복지사가 전면 배치되어야 하는 이유는 초등학생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조기개입은 삶의 전반에 나타나는 교육적 취약성을 해소하는데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2013년 9월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학생의 변화를 통해 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효과’ 종단연구). 따라서 연차별로 모든 초등학교에 교육복지사 전면 배치를 제안합니다.

#### 제안내용

○ 2003년 이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취약계층 학생에게 교육, 문화, 복지가 연계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교육소요 경비지원을 위주로 하는 기존의 교육복지정책 보다 진일보한 교육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교육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의 지급만으로 아동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체계적으로 협력하여 취약계층 아동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대전광역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실태분석 자료 발췌-2017) 따라서, 학교와 지역사회(복지관, 지자체 “맞춤형 복지팀”, 아동·청소년복지사업 기관 및 단체, 문화시설 등)의 다양한 자원들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교육복지 전문인력인 교육복지사가 모든 학교에 전면 배치되어야 합니다.

○ 현 대전시에서 아동·청소년복지사업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청에 지원하는 MOU 사업비 예산을 증액하여 사업의 안정성 및 효과성을 기반으로 대전광역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모델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 VIII. 대전광역시지역자활센터협회

### 정책제안. 자활사업을 위한 필수적 공간 및 운영 지원

#### 제안사유

○ 지역자활센터는 공공부조 전달체계로서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또 대전지역 5개 지역자활센터는 자활참여주민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를 일구어나가는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경제적 자립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장을 형성하여 경제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자활 사업은 청소, 외식, 돌봄, 주거복지 등의 공익적 서비스와 먹거리, 홈패션, 수공예품 등의 다양한 생산품을 제작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 이를 위한 여러 형태의 교육 훈련장과 생산작업장, 판매장 등이 필요함.

또한 전반적으로 팽배한 우울증, 불안 및 자신감 하락 등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완화하고 극복하기 위한 정기적인 교육과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필수적 공간 확보(상담실과 교육장, 그리고 사무실 등 최소한의 공간 약 330㎡)등의 마련도 절실한 상황임.

○ 상담실과 교육장, 그리고 사무실 등 최소한의 공간 확보의 필요와 이에따른 별도 월임 대료도 매우 부담스런 상황이며, 자활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주민의 경우 신체적으로 불편한 경우도 상당히 있으나 월임대료의 부담으로 인해 3층 이상에 엘리베이터도 없는 곳에 교육장과 상담실을 보유한 센터가 5개구 중 3곳으로 자활서비스를 제공함에 어려움이 있음. 올해부터 지역자활센터는 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의 핵심 수행기관으로서 센터별 평균 약400명 가량의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과 상담이 추가로 필요함. 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공간적인 충족이 필요한 상황임.

#### 제안내용

○ 교육장, 상담실 등 필수적인 공간(최소한의 공간 약 330㎡) 마련이 가능한 국.공유지 무상임대 지원 및 지역자활센터 독자적 건물(공간) 마련

○ 대전 원도심에 자활사업 창업보육공간 마련

☞ 5개 자활센터의 파일럿 사업단 창업준비 지원, 시설공유, 장비공유 등 제공을 통해 사업단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자활기금 활용 확대

## IX.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대전노인복지협회

### 정책제안 1. 요양원 이용시 본인부담금 상한액 설정 및 초과금 지원

#### 제안사유

- 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 전국 실시 전 대전시 차원에서의 보완

#### 제안내용

○ 문제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공약 내용 중 장기요양본인부담 상한제 도입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익숙한 공약이지만, 현재 보류 중인 공약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정책 시행시 단기적으로 재정부담을 하면서도 효, 또는 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호소가 가능함

### 정책제안 2. 요양원 입소 이용자에 대한 사회서비스 바우처 확대

#### 제안사유

- 요양원 입소로 인하여 제한 받고 있는 사회서비스 바우처를 확대하여 입소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

#### 제안내용

○ 요양 수가 수준이 지극히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고 프로그램 실행은 시설의 자원으로 되어 있어 질 좋은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요양원이 수익시설이라는 이유로 사회서비스 바우처가 중단된 상태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의 확대를 통해 요양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비용 부담을 덜고, 입소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지를 표현할 수 있음.

### 정책제안 3. 요양원 종사자 처우개선

#### 제안사유

- 요양원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특별수당 확대

#### 제안내용

○ 장기요양제도 실시 이후 다양한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요양원 종사자의 인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장기요양제도 실시 이전의 채용 종사자에 대하여만 지급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 특별수당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수당을 현실화 하여 요양원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X. 대전광역시아동복지협회

### 정책제안 1. 시설아동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예산 배정

#### 제안사유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학생들에게 시설에서 퇴소 전·후 진로교육, 직업체험, 직장체험, 현장방문, 멘토 만남 등 실질적인 활동을 위한 예산이 필요함.
- 퇴소 후 5년간 시설에서 관리 책임은 있으나 실질적인 사회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지 않았음.

#### 제안내용

- 중·고생들을 위한 자립프로그램 예산 반영
  - ☞ 퇴소후 5년간 정기적인 자립지원활동을 위한 예산 반영
  - ☞ 퇴소시 자립정착금 인상 필요.

### 정책제안 2. 아동생활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준수

#### 제안사유

- 아이들과 24시간 같이 생활하는 보육사는 교대근무 없이 365일 근무하는 것을 법 정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음.
- 보육사들의 근로기준법에 맞는 근로편성 요구 시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근무계획이 불가능한 상황임.

#### 제안내용

- 아이들과 24시간 생활하며 근무하는 보육사의 경우 교대 근무(복지부 권고 기준 2교대)를 할 수 있도록 종사자 배치가 필요함.
  - ☞ 보육사의 경우 휴가 갈 수 있는 근무 여건 마련 필요.
  - ☞ 보육사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현실화가 필요함.

### 정책제안 3. 시설별 심리치료 및 상담비 예산 반영

#### 제안사유

○ 시설입소 및 성장과정에서 아이들의 트라우마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심리치료 및 상담비가 필요함.

○ 현재는 외부지원 사업 신청 후 선정시에 상담이 가능한 구조로 지속적이 않고 단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실효성이 약함. 특히 입소인원 발생 시 의무(3년)적인 적용이 필요함.

#### 제안내용

○ 시설별 인원을 감안해서 일정부분에 심리치료 및 상담비 지원

## XI.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정책제안 1. 일하는 근로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근로수당 제도 도입

#### 제안사유

○ 최저임금의 급속한 상승으로 인한 근로장애인의 임금격차는 심해지고 상대적 박탈감은 높아지고 있다. 이를 완화하기 하기 위해서 근로장애인의 근로수당제도를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

○ 노동력의 상대적 취약함과 지역의 사업기반 부족으로 인해 대전지역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장애인들은 타지역에 비해 열악한 임금구조 빠져 있다. 이를 개선하고 노동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지급하는 종사자 특별수당과 같은 근로수당을 신설하여 일하기 위해 직업재활시설에서 노동계약을 맺고 근로를 하는 장애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제안함.

### 정책제안 2. 규정에 맞는 운영비 지원

#### 제안사유

○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운영비지급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

○ 직업재활시설의 수입원은 사업수입, 법인전입금, 후원금, 운영비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사업수입(근로장애인의 노동으로 발생한 수입)은 철저하게 근로장애인의 임금과 후생경비로 사용하도록 묶어 두었다.(법인전입금, 후원금에 대한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대전시는 2018년도 운영비보조금을 복지부에 준 가이드라인 대비 53%만 지원하고 있다. 이로 인한 기관운영의 어려움은 고스란히 복지서비스 질 낙후로 이어지고 또 각 시설들은 후생경비를 폭넓게 해석(근로장애인을 위한 것이다)하여 사업수입을 사용을 초래하며 결국 낮은 수준의 임금지급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를 끊어내고 근로장애인들이 가고 싶어하는 직업재활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p268)에 따른 운영비 보조금 지급이 선결되어야 함.



## Ⅺ. 대전광역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 정책제안 1.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급식종사자 지원

#### 제안사유

○ 급식의 질은 조리사의 질에 크게 영향을 받으나 별도의 인력지원이 없는 경우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힘든 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가 직접 조리를 담당함. 따라서 양질의 급식지원을 위해 인건비를 확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현재 대전시 아동급식단가가 1인 4,000원으로 급식비 지원액 20% 범위 내에서 조리인력이나 부대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마저도 식자재구입에 최대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지원액 20% 안에서 부대비용과 인건비로 쓰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재원으로 현실성이 없으며 인건비 사용 시 급식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함.

#### 제안내용

○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원활한 급식 운영 도모함.

-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 보조)
- 주요내용 : 대전 지역아동센터 145개소 아동급식전담인력 지원
- 소용예산 : 1,542,800천원
- 산출근거(연간) (단위: 원)

항목	인건비	법정부담금	퇴직금	합계
아동급식인력 1인	9,036,000 (월753,000/4시간)	851,004	753,000	10,640,004
아동급식인력 145인	1,310,220,000	123,395,580	109,185,000	1,542,800,580

- 2018년 최저시급기준 7,530원/주휴수당반영
- 법정부담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기관부담률

## 정책제안 2.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증액 및 차등지원

### 제안사유

○ 사회복지 분야 중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정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하며, 아동 돌봄에 대한 체계성과 서비스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하면서 아동복지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종사자에게는 끝없는 자기희생을 요구하고 있음.

○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로 법정 종사자 기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비와 인건비를 포괄하여 지급하는 방식에 인건비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의 심각한 임금수준 격차는 사회복지사로서 자부심을 실추시키고, 사회복지 종사자간의 괴리감을 조장하고 있으며 낮은 임금과 처우로 인해 이직률이 높고, 종사자 소진 증가 및 아동에 대한 서비스 질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제안내용

#### ○ 종사자 처우개선비 인상

현재의 최저임금수준의 인건비를 다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처우개선비를 이용시설 10만원, 생활시설 12만원~18만원 지원되고 있으나 생활시설의 경우 급여체계의 안정과 다양한 수당이 존재하는 반면 이용시설인 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처우개선비 외엔 별도의 수당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 마저도 대전은 <표1>과 같이 타 시도에 비해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으로 최소10만원 이상의 인상을 통해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적용하고자 함.

<표1. 6개 도시 2018년 종사자처우개선비 조사표>

구분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지원 항목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역아동센터 근무자 처우개선비	지역아동센터 근무자 종사자수당	지역아동센터 근무자 종사자수당	지역아동센터 근무자 처우개선비 및 장려수당
지원금 (월)	5년 미만 17만원 5년 이상 22만원 10년 이상 27만원	1인당 100,000원 동일	3년 미만 19만원 3-4년 22만원 5년 이상 25만원	1인당 250,000원 동일	1인당 200,000원 동일	5년 미만 12만원 5년 이상 17만원 (구비로 별도수당 2~15만원)

#### ○ 종사자 처우개선비 근무연수에 따른 차등지원 필요

현재 이용시설의 경우 근무연수와 무관하게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1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근무연수가 5년, 10년 이상인 종사자와 신규 종사자 간의 처우개선

비는 반드시 차등지원이 되어 형평성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기관 근무년차를 반영하여 최소 1~5년 미만은 월15만원, 5년 차이상은 월 20만원 지원을 제안함.

### 정책제안 3.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건강도모를 위한 공기청정기 지원

#### 제안사유

○ 미세먼지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10\mu\text{m}$ (0.001cm) 이하의 입자상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사업장 배출 가스, 자동차 배기가스,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 등의 영향으로 발생해 호흡기와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킴.

○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성 질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지역아동센터 실내공기질 관리로 오랜시간 센터에 머무르는 아동 및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증진 및 보호자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제안내용

○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아동 및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증진

-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 보조)
- 주요내용 : 대전 지역아동센터 145개소 공기청정기 1대  
렌탈 관리비 지원
- 지원방법 : 초기 비용부담을 줄이며 위생을 고려하여 필터교체  
등 관리가 용이한 대여(렌탈) 방식으로 지원
- 소용예산 : 52,200천원
- 산출근거 (단위: 원)

항목	산출근거	합계
공기청정기 렌탈비	월30,000 x 145개소 x 12개월	52,200,000

## 정책제안 4. 온 마을 돌봄의 시작 “Onestop Childcare”

### 제안사유

○ 전달체계를 기준으로 영국의 경우 '슈어 스타트 (Sure Start)' 프로그램을 통해 "유모차로 접근할 수 있는 거리 내의 지원(help within pram-pushing distance of the home)"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각 지역의 학교, 병원, 도서관 등이 아동센터를 중심으로 뭉쳐 가난한 아이들에게 '원 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에서 모든 가족에게 센터를 홍보하도록 하고 있다.

센터는 지역에 사는 가족들이 자녀를 유모차를 태워서 이동이 가능한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도록 권장한다.

○ 미국의 Head Start 프로그램은 1960년대에 '빈곤과의 전쟁'의 일환으로 시작, 아동에게 1달러 투자하면 사회는 7달러 절약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Head Start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저소득가정 아동의 사회성, 학습능력, 건강 및 영양수준을 개선하여 일반가정 아동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이며 따라서 저소득가정의 아동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Head Start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어 아동의 집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센터를 찾을 수 있도록 색인이 가능하다. 센터에는 직원이 상주하며 대상아동 선정, 서비스기관 연계, 프로그램 진행 등 역할을 담당한다.

○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청소년 돌봄은 초등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그 중 현재 대전광역시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는 154개소로 각 동마다 1~4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 지역아동센터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굴에서부터 대상선정, 등록절차, 돌봄서비스 제공 및 관리 등 모든 영역을 지역아동센터가 전적으로 맡고 있어서 인력 및 재정의 한계를 겪고 있다.

특히, 요보호 아동의 발굴에서 정말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아동과 청소년이 누구도 뒤처지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제안내용

### ○ 돌봄의 시작은 주민센터로부터~!

☞ 타 지역으로부터 전입신고 발생 시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는 전입해 오는 가정  
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있는지 파악하여 전입신고 시점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입자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인근의 지역아동센터 및 돌봄 기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과 정보제공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누구나 배제되지 않도록 함.



○ 각 동별로 설치된 지역아동센터 및 돌봄기관을 정확하게 파악된 돌봄서비스 안내  
자료를 비치하고 이를 보호자에게 제공함.

☞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파악되면 보호자에게 인근 지역아동센터 및 돌봄서비스  
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비치하고 이를 안내하며 제공함.

### ○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통합 홈페이지(앱) 운영

☞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어떠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와 어디에 위치하고 있  
는지, 해당 센터의 종사자는 몇 명인지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등의 기본적  
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  
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XIII. 대전광역시공동생활가정

### 정책제안 1.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 처우개선

#### 제안내용

○ 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은 1인이 4명의 장애인을 24시간 행정.취사.전인케어 등 실근무하는 바 종사자 총원과 거주시설 급여와 시간 외 수당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제안 2. 형평성 있는 지도점검 시행

#### 제안내용

○ 구청 점검이나 감사의 목적을 명확히 안내하고 또한 5개구 담당자가 일괄 된 내용으로 1인 사업장의 특성을 이해하여 형평성 있는 점검이 시행되도록 개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XIV.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정책제안. 대전시민복지기준선 실행을 위한 제도 구축

#### 제안사유

- 복지국가는 시대의 흐름으로 잔여적이고 시혜적인 복지정책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를 요구하고 있음.
- 대전시민 복지기준은 인간다운 삶의 기준으로 대전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정책의 기준을 의미함.
- 지난 민선6기 대전시민 복지기준선 수립은 했으나 이를 실행할 제도적 장치(조례 등)는 미비하며, 이로 인해 어렵게 만든 복지기준선이 자료로만 남음.

#### 제안내용

- 복지기준선 수립 및 이행의 근거가 될 조례 제정
  - ☞ 조례를 기반으로 대전시가 일방적으로 정한 복지기준이 아닌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기준선 수립
- 대전시민 복지기준선 수립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시민욕구조사, 정책개발, 이행점검, 평가를 담당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
  - ☞ 대전시, 사회복지계, 시민,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 보장
- 시민복지 최저선 및 적정선 제시 및 연차별 실행
  - ☞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기준선 제시
  - ☞ 복지최저선을 지키기 위한 연차별 계획 시행

## XV.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 정책제안 1. 대전시민복지기준선 재정립 및 이행체계 수립

#### 제안내용

- 우선정책의제 1(1P) 참조

### 정책제안 2.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 제안내용

- 우선정책의제 2(3P) 참조

### 정책제안 3. 사회복지전달체계 민관협력 강화

#### 제안내용

- 우선정책의제 4(14P) 참조



## 정책제안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여건 및 환경개선

### 제안사유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여전히 과중한 업무강도와 근로시간 이외의 초과근로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낮은 사회적 인식을 받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늘어나고 있는 업무량과 사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 요구 수준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인력보충은 미미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대전시의 사회복지시설 중 종사자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유형은 장애인복지시설 207명, 아동복지시설 101명, 사회복지귀시설 3명 등 총311명임.(2017년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사의 근속 및 평균경력기간이 전체 임금노동자에 비해 약 71%에 해당하여 전문적·지속적 서비스 제공에 한계 발생(국가인권위원회, 2013년)

※ 사회복지사 근속기간 : (민간) 41.8개월 (공공) 94.8개월 / 전체 노동시장 72.8개월

○ 사회적 요구에 대한 반영과 시설 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환경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인력충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권 보호 강화 및 휴먼서비스 제공자로서 사회복지 전문직으로의 사회적 인정체계 마련 등이 필요함.

### 제안내용

○ 사회복지사의업 근로시간특례업종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빠른 현장 안착을 위해 거주시설의 표준근로형태를 3교대제로 도입해야 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근로환경개선을 위해 인력충원은 업무강도 개선 및 근로환경 개선에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음.

현재의 사회복지시설 인력배치기준을 시설별로 재검토함으로 인력배치 기준의 상향조정과 인력충원 방안을 모색하고 확대 적용하는 선제적 접근이 필요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수체계강화 및 종사자의 기본적 근로권과 휴식권 보장 등 근로환경 개선,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체계 강화가 필요함.

○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 및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현재 지원되고 있는 법정 보수교육비 전액(1인 연 48,000원) 지원이 필요함.

## XVI.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 정책제안 1. 사회복지직능단체 기능정상화

#### 제안내용

- 우선정책의제 3(8P) 참조

### 정책제안 2. 대전사회복지인권지원센터 설립 추진

#### 제안내용

- 우선정책의제 5(16P) 참조